

제369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9년7월15일(월)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2. 2019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3. 201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4. 2019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5. 2019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2. 2019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
3. 201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
4. 2019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
5. 2019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

(09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학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2. 2019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3. 201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 계획변경안(계속)

4. 2019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계속)

5. 2019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계속)

○위원장 김학용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산업 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김동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 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위원장 김학용** 예, 그러시지요.

○**임이자 위원** 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이면서 이번 추경 예결소위에 임했던 사람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든지 원칙에 준해서 일을 해야 되고 원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우리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보게 되면 정부는 전쟁이나 대규모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큰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호에서는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3호에서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봤을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부분이 전혀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최근 인 천 붉은 수돗물이라든가 수돗물 관련되어 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부분들로 인해서 국민들의 건강권과 쾌적한 생활 안전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추경에 임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추경에 임했을 경우에도 3당 간에 의견이 분분하여 절대 의결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의결했음을 말씀드리면서 예결위에서는 상임위 부대의견을 유념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방치쓰레기 관련되어 가지고는 조금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의성군 단밀면에 있는 방치 쓰레기 17만t 관련되어서 환경부장관께서도 와서 주민과 약속했던 부분이 있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언급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철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동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김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2019년 7월 10일과 11일 두 차례 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검토보고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1817억 200만 원을 증액하고 439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541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감액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566억 2500만 원을 증액하고 15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첫째,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113억 8100만 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서 88억 30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서 59억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대기개선추진대책 사업에서 132억 7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서 전기버스 구매보조금 및 전기버스 충전기 구축 관련 15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증액내역은 첫째,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에 48억 9000만 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498억 3000만 원,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에 43억 4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사업 중 쿨링엔 클린로드 확대 설치를 위하여 566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대기개선추진대책 사업 중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지원 사업 등의 국고보조를 또는 지원단가 상향 등을 위하여 1381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사업에서 미세먼지 감시 항공기 도입 및 국가대기질예보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2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전기버스 보조금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으로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

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회계에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중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일반지역 사업물량 500명분 8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에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공기청정기 설치방식을 직접 구입에서 임차 방식으로 변경토록 하고 그 차액인 3억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에서 근로자건강보호사업의 영세사업장 마스크 지원 물량을 하반기 미세먼지 나쁨 일수 예측치를 고려하여 19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1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한편 근로조건개선지원사업에서 6억 500만 원, 일터혁신컨설팅사업에서 25억 5000만 원의 삭감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았음을 기타사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주요 감액내역은 첫째,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사업 중 위험기상 현장 대응용 드론 1대 구입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기상업무지원 기술 개발연구사업 중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인공강우용 로켓 구입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추경예산 심의를 위해서 애써 주신 김동철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 지금 임이자 위원님께서 의성 쓰레기 처분에 대해서 추가로 증액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일단 국가 예산으로 이것을 처리하더라도 원인자 책임의 원칙에 의해서 환경부가 끝까지 책임 추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 주시고.

또 하나는 이게 선례가 될 것 같으면 전국에 산재한 모든 쓰레기를 중앙정부 예산으로 다 치우게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국회 환노위가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원인자들에게 비용을 끝까지 추궁해서 확보하겠다는 관계부처의, 환경부의 어떤 의지 표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론적인 것인데 추경예산이 정권이 새로 들어와서, 지난번 대통령선거를 여름에 하고 예산을 이미 했기 때문에 첫째 같은 경우에는 새 정권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엄격한 의미의 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 추경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대규모 추경을 하는 것은 환노위 예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예산을 거의 두 번씩 하는 게 아니냐에 대해서 이것은 환노위 문제뿐 아니라, 이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를 제가 기록으로 남겨 두고자 합니다. 매년 이렇게 추경할 것 같으면 과연 우리 예산 재정의 원칙을 정부가 뿌리부터 허무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예산 같은 것은 또 예결산위원회에서 다루겠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려하는 바가 많습니다.

특히 수돗물 관련 그런 것도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의 시설에 책임이 있는가, 어느 정도 운영에 책임이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도 안 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증액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도 원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오늘 환노위가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또 예결위 있고 본회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처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고서 국민 세금을 지출하는 데 좀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 계시면……

강효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상 위원 환경부장관님, 추경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난번 전체회의

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문제에 관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한번 좀 챙겨 봐 주십시오. 아직 안 온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더 이상 말씀하실……

○**이정미 위원** 위원장님, 현안질의는 따로 시간 주십니까?

○**위원장 김학용** 지금 다 하세요. 하시고 싶은 것 있으면 다 하십시오.

○**이정미 위원**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환경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상에 라돈을 명기하고 있고 이 라돈은 일반적으로 Rn-222 그리고 토론이라고 부르는 Rn-220 이렇게 2개를 다 포괄해서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이정미 위원** 그런데 실내공기질 공정시험 기준에 따르면 사실 이 시험 방식으로는 토론의 영향을 굉장히 극소하게, 최소화하는 측정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장, 벽면, 아래로부터 다 떨어트려 놓고 측정을 하기 때문에 토론에 대한 검출은 거의 불가능한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도 이 시험 기준이 실질적으로 Rn-222만 측정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환경측정기기 관련해서도 작년 12월 28일 날 환경측정기기의 기준이 Rn-222만 검출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기기로 고시를 변경하였습니다. 왜 이 측정기기를 Rn-220을 제외하고 Rn-222만 측정할 수 있는 기기로 변경을 한 것이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라돈하고 토론을 함께 놓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론 같은 경우에 측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분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정미 위원** 그러면 토론은 별도로 또 측정해가지고 같이 그 측정 결과값에 넣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측정기기는……

○**환경부장관 조명래** 기존 측정기기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일단은 분리를 해야 라돈 분석이 정확하게 된다고 보고, 토론 같은 경우에는 표면을 벗어나게 된다면 측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이정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때까지 파악했던 것이라 굉장히 다른 답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인데요. 실내공기질 공정시험 기준에는 라돈과 토론을 각각 다른 기기로 각각 측정해서 그 값을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 고시 변경의 기준이?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분리를 하는 겁니다.

○**이정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리를 한다는 게 지금 건설사들은 환경부에서 변경한 내용대로 Rn-222만 측정할 수 있는 기계로 측정하면 되기 때문에 토론값을 우리가 따로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장관님 말씀으로는 라돈도 측정하고 토론도 측정해서 두 가지를 다 공기질 관리 대상으로 넣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답변으로 확인한 것으로 하던 됩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제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국장이 자세하게……

○**위원장 김학용** 국장님, 답변하세요.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입니다.

공정시험법을 개정한 이유는 토론과 라돈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보려고 했던 의도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개정했던 것을 다시 검토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토론의 관리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 형태로, 표면에서 측정했을 때 토론이 굉장히 높게 나와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나 그 다음에 주민들도 토론의 농도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안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답변을 하신 것인데 이제까지는 건설사들이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토론까지 측정하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우리한테 주지 않았고 Rn-222만 측정할 수 있는 기계로 측정해서 안전성을 통과하면 되는 것인데 왜 자꾸 토론까지 문제를 삼느냐……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하미나** 현재 그렇지 않고요. 공정시험법을 개정을 했다 하더라도 기존에 형식승인을 받은 장비는 향후에 10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토론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건설사에서 측정하라는 기준을 아직 마련 안 하신 겁니까?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하미나**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 기존의 공정시험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토론과 라돈을 같이 측정할 수 있는 장비도 형식승인이 되어 있고 또 라돈만 측정할 수 있는 장비도 형식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승인이 되어 있는 장비는 향후에 10년까지도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로……

○**이정미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이것 완전히 잘못된 얘기를 하시는데요. 건설사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Rn-222만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측정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처럼 얘기를 하시려면 라돈만 측정할 수 있는 기계에다가 토론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도 함께 사용해서 2개의 값을 다 검증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지요.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하미나** 현재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형식승인을 받은 장비로는 그렇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에서 라돈만 측정되는 것 그것으로만 하겠다 하는 것은 반드시 맞는 말은 아니고요.

○**이정미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현재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토론은 관리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하미나** 토론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관리 대상이라고 가이드라인에 규정되어 있어요?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하미나** 그런 가이드라인은 없는데요……

○**이정미 위원** 그럼요. 그렇지요. 안 되어 있으니까 건설사에서는 지금 환경부에서 작년 12월 28일 날 측정기기도 Rn-222만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토론은 관리 대상도 아니고 기계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토론은 제외되어 있는 겁니다.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하미나** 위원님,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국토부, 원안위 이렇게 함께 공동연구를 시행을 해가지고 지금 그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미 위원** 언제 나오니까, 그 가이드라인

이?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하미나** 곧 나올 겁니다. 지금 아아……

○**이정미 위원** 곧이라는 게…… 지금 이미 라돈 문제 때문에 모든 아파트들이 들썩들썩하고 환경부에서 그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건설사에서는 마구 우기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소비자원까지 가 있고 소비자원에서는 이 측정기기에 대해서 양자, 건설사와 주민들이 다 합의한 기계가지고 측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장에서 엄청난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요.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하미나** 작년부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지금 국조실에서 같이 조정을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에 있고 곧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금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장관님께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일 농도로 노출 시에 토론은 라돈 유해성의 6배고요. 그리고 라돈 아파트 문제가 확산되고 있으니까 건설사에서 몰래 들어와서 라돈 저감 코팅을 하고 나가고, 이렇게 주민들을 기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된 조정 절차를 밟으려고 해도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해서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안전기준을 초과한 라돈 건축물들에 대해서 혹은 그 안의 자재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옳은지에 대한 마땅한 조치가 빨리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라돈 아파트들 내부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환경부 안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귀를 기울이셔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먼저 예산부터 마무리 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현안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예산과 관련해서 하실 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한 말씀……

○**위원장 김학용** 김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의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의결 전에 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결심사소위원으로서 고용부·환경부·기상청 소관 예산을 심사하면서 느낀 소회도 있지만 추경 전체, 나아가서 국가 재정운용 전체를 놓고 본다면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꼭 정치인으로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참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3년 차를 맞이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상적으로는 다 맞는 것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이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나 장기적으로 봐서 탈원전이나 기본적인 방향에서는 맞는 것이지만 우선 준비가 부족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대책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마구 저지르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예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놓고서 말씀드리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 소관에서 실업급여예산을 8200억 증액했습니다. 금년에 구직급여 대상자를 121만으로 예상했다가 10만 명이나 더 늘려서 잡은 수치니까 그만큼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늘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을 파고든다면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고용보험기금 자체를 우리가 증액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법정배율인, 실업급여계정이 이번 추경이 반영되면서 이제 적립배율이 0.4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법정배율을 1.5~2.0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법 정신의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에 하나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대량 실업이 현실화됐을 때 그걸 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이잖아요.

물론 이것은 문재인 정부만의 탓은 아니고 역대 정부가 그렇게 해 왔었지만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이걸 정말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을 드

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곳에 있다면 이게 어떻게 선진적인 국가 재정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도적인 것도 하지 못하면서 말이지요.

최저임금도 이번에 경제현실을 문재인 정부도 수용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사과까지 했지만 첫 단추 잘못 낀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난 2017년부터 금년까지 일자리 사업에 81조 5000억 퍼부었습니다. 물론 정부는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은 다 도외시하고 고용률 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고용률이라는 게 전부 고령의 단기·저급한 일자리들만 늘려 놓고 말이지요 고용률 숫자 갖고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지난 2년 동안에 5조 7800억 또 책정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정책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제가 이 자리에서는 꼭 환노위 차원에서, 예결소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 케어로 얼마 전에 2.2조 원 의료비 경감 혜택 했다고 대통령께서 직접 홍보하셨지만 2026년이면 건보재정이 고갈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갈에 대비한 건강보험료 인상 얘기는 쉬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책임 있는 정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뿐입니까? 기초연금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지요. 아동수당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요. 그러면서 전기요금 누진제는 총선 전에 완화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은 총선 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3 무상교육 조기 도입을 선언하니 이제는 자유한국당도 고교 무상교육 전면 도입을 주장하고, 이렇게 포퓰리즘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정치권이 이렇게 복지 포퓰리즘 경쟁에 나서면 그렇게 해서 국가재정이 바닥나면 우리라고 해서 남유럽, 남미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4차 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육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제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과거 2015년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서 국가채무비율이 마지노선 40%를 넘었다, 박근혜정부 3년 만

에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하신 분이 말이지요. 이제 와서 국가채무비율이 미국은 100%, 일본은 200%가 넘는데 우리는 왜 40% 안팎에서 관리하겠다는 근거가 뭐냐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위탁을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정말 이런 말씀 들으면 참담해질 수밖에 없어요.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연평균 9조 6000억, 총 48조 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동안 거의 칠팔 년 가까이 계속됐던 추가세수도 이제 없습니다. 없어요. 이제 들어갈 일만 남았습니다. 5년 동안 48조 원의 추가 재정 소요는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야당의 발목잡기로 여론을 호도할까 싶어서 부대의견이라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부득불 수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국가재정 운용 전반을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대한민국 현실이 걱정되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기록으로 남길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꼭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다고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논의에 나서야 된다 그런 점을 상기시키고 싶어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장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어쨌든 이번 추경은 국가 재정운용상 사실은 해서는 안 될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경을 밀어붙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경제 실정이나 여러 가지 실정들을 추경을 안 해 주면…… 저는 책임을 돌리려는 상당한 숨어 있는 뜻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금년도 예산을, 슈퍼예산을 짰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제대로 집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국가 재정운용상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는 고용노동부장관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용하고 노동 관련 실질적인 주무 책임은 고용노동부장관인데 고용노동과 관련된 전체 국가 운영상 장관의 목소리는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제가 금년 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아주 괴물이 국가 전체를 삼키고 있는 겁니다. 소득주도성장에서 지금 현 정부가 추구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이런 것들이 국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조기에 ‘아, 이것 문제가 있구나’, 아무리 좋은 이론이든 가야 될 길이라도 현재 상황에 맞지 않으면 빨리 수정을 해서 궤도를 수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그냥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전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는 소득주도성장 부분도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말이 안 맞습니다. 세금주도성장, 세금 퍼붓기 성장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을 일부 또 올렸습니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벌써 1만 원이 넘는다는 것 아닙니까? 주휴수당 때문에 지금 편의점이나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 부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지금 다 사라지고 있고 15시간 미만짜리 단기 알바 일자리만 생산되고 있는 이런 현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제대로 인식을 해서 청와대하고 상의를 해서 개선할 건 개선하고 폐기할 건 폐기하고 그리고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고 얘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 자체가 이런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목소리가 없는 이런 정부가 있다 보니까 청와대 중심의 모든 국정운영,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부가 다 할 수 있는데 정부가 다 할 수 있다는…… 권한과 이런 것들을 청와대가 다 움켜쥐어 가지고 주무장관들은 허수아비처럼 세워 놓고서 시키는 대로 하는 이런 나라가 잘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만 정부가 기업들을 규제하고 기업들을 자꾸 옥죄고 이런 정책으로는 대한민국 성장을 도모할 수가 없다. 기업에 자율을 주고 창의적인 것들을 도모할 수 있게 해 주고 기업 성장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이런 걸 통해서 고용을 늘리고 그러는 것이지 어떻게 세금을 퍼부어 가지고 고용을 늘립니까? 이런 발상을 하는 고용노동부 포함한 정부에게 굉장한 유감을 표하고요.

고용노동부장관도 분발해 줬으면 좋겠다. 더 이상 청와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받아서 끌고 가는 이런 고용노동부장관이 돼서는 안 되겠다,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챙기고 나아가서 국가 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고용 상황

그리고 경제 상황을 직시해서 제대로 챙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지금 타워크레인을 놓고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기업주들 겁박하고 또 두 노조가 싸우고 그러면서 정말 사업하는 사업주들에게 고통을 안기는데 고용노동부가 아주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업들한테 가서 겁박하는 것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개선책도 적극적으로 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일체 안 하고서 어떻게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된 상생이 가능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 챙겼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학용 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단 소득주도성장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혁신성장과 균형을 맞추면서 혁신성장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 패키지를 다양화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에 나타난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도 방관하고 있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법을 지키면서 노사 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행 법령상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 수단에 한계가 있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장관님, 지금 답변이 현장에서 제대로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그 통계 있습니까? 조사해 본 것 있어요? 전국의 통계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번의 경우에도 건설 현장에서 자기 조합원만 채용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이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노동위원회에……

○이장우 위원 그게 전국에 몇 건이나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190건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이장우 위원 190건은 말도 안 되는 통계입니

다. 지금 한 시도별로 190건은 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엉터리라는 겁니다. 현장에 앉아 가지고 그대로 탁상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학용 하여튼 그 문제는 필요하면 또 이따가 현안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한정에 위원님.

○한정애 위원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가능하면 추경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본예산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역대 정부에서도 추경 편성을 한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번 추경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에 4조 9000억 정도를 편성했었고요. 2009년에는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는 28조 900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국채를 22조나 발행을 했습니다. 경기가 하방의 위험이 있을 때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하방이 되는 것을 가능한 막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정부에서도 2013년에는 17조 3000억 추경 편성을 했고요. 이 당시 국채 발행이 15조 8000억이었습니다. 2015년에도 11조 8000억이었고요. 당시 국채를 9조 6000억 발행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016년에도 11조 추경 편성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에 11조 2000억, 새 정부 들어서 그렇게 했고요. 2018년에 3조 9000억 그리고 올해 6조 7000억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국채 발행이 전혀 없었다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3조 6000억의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해서 지금 정부 편성안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는 어떻게든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이 경기가 더 이상 하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야당 위원님들 그래도 적극적으로 추경 심사에 임해 주셔서 오늘 결과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런저런 문제가 되는 소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해당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산을 집행할 함에 있어서도 유의 깊게 잘 집행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전체회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한정애 위원** 2015년 법 개정해서 올해 7월 1일 자로 시행이 되는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고받는 내용…… 제가 국토부로부터 보고를 받아 봤는데요, 국토부는 이렇게 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처 내의 협의를 하겠다든지 하는 의지 조차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좀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실제 이 문제가 닦칠 수 있는 대한건설협회나 전문건설협회의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소지들을 좀 없애고 부처들이 적절하게 내용들을 공유하고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시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추경예산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헌법 제57조와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정부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9년도 추경예산안의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환경부장관님,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다음으로 환경부 소관 추경예산안 중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상임위원회 동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데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9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3항 201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4항 2019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5항 2019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각각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구체적인 계수와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위임받을 사안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의결에 대한 각 소관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소위 활동기간 중에 각 사업별 예산안의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김동철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부는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내용들이 이후의 심사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힘주어 지적하신 대로 편성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함은 물론 꼼꼼한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환경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

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소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의결해 주신 김동철 예산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민건강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소중한 국가재정이 미세먼지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 민생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신속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다음은 기상청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김종석** 존경하는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기상청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김동철 예산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상청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잘 쓰이도록 사전 준비와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기상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상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다해 주신 김학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창현 위원님 그리고 임이자 위

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강효상 위원님.

○**신창현 위원** 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신창현 위원**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2.87%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최저임금 인상률은 아마 노동계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선 인상 금액으로 보면 과거보다 낮은 금액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았던 점 그리고 그 사이에 저임금 비율도 감소하고 이런 측면들을 고려하면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경제·고용 상황을 좀 포괄적으로 고려하면서 최저임금위에서 의결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창현 위원** 그 2.87%의 산출 근거가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통상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안을 제시하면 공익위원들이 산출 근거를 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안을 내지 않고 노사 양측의 최종안을 제출받은 상태에서 표결을 해서 의결을 하다 보니 산출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창현 위원** 공익위원이 왜 안을 안 냈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것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위원장의 회의진행 방식이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신창현 위원** 공익위원안은 노동부가 같이 작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독립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고용노동부하고 우선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신창현 위원** 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이제까지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렇지 않습니다.

○**신창현 위원** 법대로 해 온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과거, 작년도도 그렇고 재작년도도 그렇고 정부에서 최저임금안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심의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신창현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사과했습니다, 약속을 못 지켜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대통령 약속이지 내가 한 약속은 아니니까 상관없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라는 선거공약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번에만 말씀하신 것 아니고 사실은 작년년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문에도 보면 ‘두 번째 사과하셨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신창현 위원**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국제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역시 국내적으로 그 여파가 또 자유롭지 못해 경제가 어려울 때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그런 상황 인식에서 노동자부터 허리를 졸라매자 하고 이번에 2.87% 인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의 세 주체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와 사용자, 2개의 수레바퀴로 굴러가는 게 우리 경제 아닙니까? 노동자가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서 경제 살리자고 먼저 앞장서면 사용자도 앞장서야 될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장관의 입장에서 사용자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허리띠 졸라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글썄요, 갑자기 이렇게 포괄적으로 질문하시면 답변드리기가…… 조금 더……

○**신창현 위원**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신창현 위원** 조금 전에 자유한국당 위원들께서도 일반적인 경제 상황 전반에 관해서 우려를 표시하면서, 특히 노동부가 관여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장관님은 고용노동부장관이십니다. 그러면 이번 2.87% 인상에 대해서…… 산업부장관이 그렇게 인상한 것은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노동부장관의 목소리가 안 들려서 제가 지금 자꾸 여쭙보는 겁니다.

이게 산업부장관이 요구한 인상률인지 노동부장관이 요구한 인상률인지를 제가 지금 확인하고 싶어서 근거가 뭐냐고 여쭙보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최저임금 심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이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그 금액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용자의 경우에는 이제까지 최저임금 인상된 부분에 누적해서 이번에 2.87%가 추가로 인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2.87% 인상됐습니다만 어저께 청와대의 정책실장께서도 기자 브리핑에서 밝히신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만이 노동자들의 또는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소득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ITC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보완적인 정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창현 위원** 장관님, 그 얘기부터 나가면 이제 고용노동부의 범위를 벗어나서 기획재정부나 산업부장관과 같이하는 얘기가 되는데요, 제가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최저임금이 전반적인, 종합적인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장관님 말씀대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법에 따라 2.87%로 결정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님은 고용노동부를 담당하는 장관이면서 국무회의의 일원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재정부장관이나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노동부장관으로서 무슨 얘기를 하실 것인지를 제가 여쭙본 거예요, 사실은. 그게 바로 노동자의 권익을 대표하는 주무부처 장관이 하실 일 아닌가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지금 단계……

○**신창현 위원** 여기서 토론할 생각은 없습니다. 당부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지금 단계에서 제가 해야 될……

○**신창현 위원** 장관님, 토론할 생각 없고요. 제가 당부할게요. 그렇게 해 주세요.

참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이? 그때 장관님이 무슨 말인가 해야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얘기 안 하시면 누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합니까?

국무회의에 가서도 얘기하셔야지요, 이번 2.87%에 대해서. 종합적인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노동자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다, 그러나 노동부장관 입장에서는 우리 경제가 언제까지 노동자들의 희생을 이렇게 강요하고 책임을 떠넘길 것이냐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노동부가 존재하는 이유 아닌가

요?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자유한국당 임이자 위원입니다.

지금 총선이 다가오니까 양 정당들끼리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한 것 같습니다.

현 문제인 정권에서는 우리가 추경 갖고 지적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전 정부에서도 국채를 발행했다, 전 정부에서도 그랬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가 지금 상당히 나빠지고 있고 경제지표가 최악으로 달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게 순환적인 요인이나 구조적인 요인이나를 바라봤을 때 순환적인 요인, 즉 경기변동에 의해서 이 부분이 나빠지고 있다고 한다면 재정을 갖다가 확대해서 확대재정을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있고, 모든 부분들이 구조적인 요인에 기한다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게 나빠지고 있다고 한다면, 재정은 퍼부으면 퍼부을수록 이것은 더 재정 악화로 치닫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노동부장관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혁신성장과 결과적으로는 노동의 유연성이 답이다라는 겁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정부에서도 혁신 성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혁신 성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시자고요. 혁신 성장에서 혁신 성장이 뭘니까, 주된 내용이? 한마디로 짝 하면 뭘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한마디로 하면 규제 혁신, 신산업 발전 이런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혁신 성장을 그냥 말로만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혁신 성장 어떻게 이루어 내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래서 정부에서도 규제 혁신에 많은 힘을 쏟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체들이 투자를 통한 신기술 개발, 신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규제 혁신에 많이 힘 쏟고 있는데 정부 여당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 성장이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딱 한마디로 한다면, 전 노무현 정부 때 정책 실장을 하셨던 변양균 전 실장의 말에 의하면 자본, 토지, 기술 다 먹싱해 가지고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한다면 물론 장관님께서 얘기했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야 되겠지만 지금 규제를 안 풀고 있는 게 정부 말고 여당이에요, 여당.

그러면 한 가지만 딱 내가 여쭙볼게요.

지금 일본 수출품들이 규제 조치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품목이 가장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중에서 두 품목은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런데 국산화가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한 예를 든다면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평법, 화관법, 특히 화관법에서 그전에 79가지로 규제했던 부분이 413가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산화가 도저히 한국에서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아마 환경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임이자 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돼 가지고…… 물론 이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런 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잘 믹스해서 조화롭게 해서 어떻게 해낼 것인가 이런 게 바로 혁신 아닌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이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답답해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전부 다 뭐 하면 전 정권 탓, 전 정권 탓, 전 정부 탓……

또 지금 노동도 마찬가지예요. 변양균 실장도 지적하셨다시피 노동 관련돼도 노동의 자유를, 노동의 자유…… 물론 여기는 사회안전망이 탄탄하게 보장돼 있고 노동에 대한 자유를 줘야 된다는 게 있고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도. 투자의 자유를 하려면 우리가 열어 놔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노동 유연성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투자를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생각은 어때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특히 기업에서 노동시간의 유연성이라든지 임금의 유연성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이자 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타 국가와도 경쟁력을 하고 이리려고 한다면 또 오픈 줌 시켜 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답답한 게, 지금 이런 게 가장 답답한 거예요. ILO 관련돼 가지고 ILO 핵심협약에 대해서 비준을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ILO에 가입돼 있는 이상 어떻게 핵심협약을 비준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ILO 핵심협약을 갖다가 비준하고 그다음에 기타 선진국에서 규제들 하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대체근로 문제라든가 직장 내 점거 문제라든가 또 단체협약 유효기간 문제라든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균형을 맞춰서 국가경쟁력을 갖춰야만 우리가 수출에서 우위를 선점해서 우리가 또 다시 투자하고 또 일자리 만들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민노총 말대로 ILO 가입했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어긋나서는 안 되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반대편에서는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데 여기 관련돼 갖고 노동부장관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저희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9월 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다 제출해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금 수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안을 지금 마련해 보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장관님, 결과적으로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들의 보호해야 될 권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축소시키거나 임금을 감소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지만 서로 조화롭게 가야 되지 않

겠습니까? 안 그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당연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아무리 노동자들 임금 많이 올려 주고, 아무리 노동자들의 권리를 갖다가 확대시켜 놓는다 한들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랬을 경우에 일자리는 결국 없어요. 그러면 세금 갖다 퍼붓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세금도 기업이 세금을 많이 냈을 때 그것 가지고 우리가 복지에다 쓸 수 있는 돈들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위기이고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최악으로 가고 있고 아무리 고용률 높다 해 분들 한 달에 한 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잡히는데 이게 다, 김동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이런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노사의 균형을 좀 맞추자, 맞춰서 국가경쟁력을 좀 키우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업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자 이게 지금 우리 한국당의 생각이고 제 생각도 그래요. 무조건 최저임금 많이 올려 주면 좋지요. 2만 원 왜 못 올려 줘요? 현장이 수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장이? 시장이 감내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기업도 그래요. 단체협약 아무리 잘 만들어 놓고 아무리 잘해도 기업 부도나면 다 쓸데없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시장의 실패는 고쳐 쓸 수 있지만 국가의 실패는 완전히 침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야당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관도 너무 그런 데 하지 말고 균형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논의해야 될 그런 관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노동자들도 보호하면서 우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균형 있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차관은 장관을 대신해서 예결위원회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이석을 허용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상 위원** 자유한국당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강효상 국회의원입니다.

우선 기상청장님.

○기상청장 김중석 예.

○강효상 위원 올해 초복이 지났는데요.

○기상청장 김중석 예, 그렇습니다.

○강효상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이상 저온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기상청장 김중석 예, 아직까지 우리나라 상공에 찬 공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마전선이 아직 북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온도가 조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강효상 위원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고 아직 열대야현상도 나타나지 않고 있지요?

○기상청장 김중석 예, 그렇습니다.

○강효상 위원 그러면 올해 폭염 내지 여름 날씨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기상청장 김중석 연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티베트고원 쪽에 지금 현재 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상층 공기가 굉장히 차가워서 작년에 비해서 장마가 좀 늦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또 작년처럼 41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극한 폭염은 없지만 지구 기후변화가 굉장히 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태라 열대야나 폭염 일수는 거의 작년 일수하고 비슷할 것이다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장마전선이 북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덥지는 않지만 7월 말쯤에 장마가 북상하고 나게 되면 아마 8월부터 한 달간은 좀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효상 위원 저온현상이라면 우리 영농 이런 여러 가지 농사나 농업이나 산업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기상청장 김중석 예, 그렇습니다.

○강효상 위원 또 자칫 폭염 전망을 너무 소홀히 하다가 후반기에 폭염 대비에 준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기상청장님께서 직원들 독려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김중석 그래서 세계의 기상 변화를 계속 우리가 감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변화되는 대로 국민들에 대해 즉각 속보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상 위원 노동부장관님, 최저임금 문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부터 급속도로 상승이 된 것이지요? 2017년, 2018년에서 약 29.1%p가 상승한 것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강효상 위원 그러면 이번에 2.87까지 합친다면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이 몇 %가 인상된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연평균 9.9% 인상되었습니다.

○강효상 위원 평균이 얼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9.9%입니다.

○강효상 위원 누적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누적은……

○강효상 위원 30%가 넘었지요? 그건 좀 계산을 하시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랬을 것 같습니다.

○강효상 위원 예?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럴 것 같습니다.

○강효상 위원 그럴 것 같다는 게 아니고 그 정도는 노동부장관님께서 계산을 하고 나오셨어야지요.

지금 새 정부 들어서 30%p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은 한마디로 정말 무식한 행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제 체질이 과거 5·6공 시절도 아니고 체질이 허약해 있는데 이렇게 30%p 이상, 제가 작년 10월에 본회의에서 처음 최저임금 동결을 제안한 이후에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그 취지를 이해를 해서 이번에 2.87% 소폭 인상을 결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전히 높다, 이번에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동결로 갔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물가인상률 1.5% 수준 정도에서 묶어서, 그래서 우리 경제가 다시 여러 투자 주체라든지 또 해외 주체들이 같이 한국경제가 그래도 정말 노사가 허리띠를 묶어서 다시 재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구나 생각하는 그런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또 인상을 하고 30%p가 훌쩍 넘도록 이렇게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도대체 시장에 주는 임팩트도 상당히 약하고 노사도 다 불만을 갖는 참 애매한 정책결정이었다, 저는 이렇게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2.87은 그렇다 치고요. 그대로 결정이 되겠지요, 2.87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법에 따라서 최저임금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 통보가 오면 저희가 고시를 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강효상 위원 현재로서는 그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이 문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업종별 차등의 경우에는 현행법에서도 업종별로는 차등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저희도 그 의견을 요청했었고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해서 표결까지 했습니다만 내년도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강효상 위원 그래서 올해는 어렵다? 어렵게 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강효상 위원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대해서 정부가 부응을 해야 됩니다. 부응을 하는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굉장히 아쉽고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장관님, 지금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 등 해서 낙동강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그렇습니다.

○강효상 위원 제 질의 끝나면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요.

저는 백가쟁명 식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각 지자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장관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영주댐 다녀오셨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강효상 위원 그 상황이 어떤지, 댐 안전성은 어떤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영주댐 정상화, 용수공급 이런 데는 차질이 없는지 장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지금 낙동강 용역 관련해서는 아시겠습니까만 지난 4월인가 5월인가 상류 지자체장들이 참여하는 MOU를 저희들이 체결했고요. 하류 지자체장들이 참여하는 MOU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물 문제는 일단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돌파구를 찾으려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하류 관련된 지자체 혹은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도출할 참입니다.

그리고 그 용역은 아시다시피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미산단에서 나오는 폐수의 재이용을, 100% 재활용하는, 그래서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는 연구이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수자원의 다변화를 도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구는 중간보고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의 중립성과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구성도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분들로 동등한 숫자로 구성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지자체 관계자들도 동등한 숫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제부터 여러 가지 논의 그다음에 방안 도출의 모든 과정에서 지자체 내지는 지역주민들이 동등하게 참여해서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방안도 도출할 계획입니다.

○강효상 위원 그 후자 용역에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도 들어가 있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취수원 다변화를 찾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댐은 일단 시민단체에서 안전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우리 환경부에서 전문가를 구성해서 일단 점검을 했습니다. 현재 법정기준에 의한 점검을 했을 때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주민들이라든가 환경단체에서 안전성 문제 등을 포함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에서는 점검을 위한 점검단을 다시 구성하고 영주댐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할 수 있는 연구단을 구성해서 용역을 하든지 혹은 전문가를 구성해서 다시 진단을 하든지 이런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효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정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환경부장관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화평법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이게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입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다른 나라도 다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위해관리계획서, 장외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뭐냐 하면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공장서 관리를 할 수 있기는 하되 평소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계획 또는 문제가 생겨서 유출이 되었을 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한정애 위원** 그것은 국민의 안전과 또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이 쓰고 있는 환경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만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다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일본 무역규제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세 가지 물질 중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불화수소, 불산과 관련한 부분인데 불산은 크게 태양광 폴리실리콘 모듈 만드는 데 들어가구요, 거기도 에칭가스 들어가니까. 그리고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데 태양광 공정에 들어가는 에칭가스는 거의 다 국내산을 씁니다.

그런데 반도체 공정에서는 국내산을 쓰지 않았던 것이 순도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것은 파 이브나인(99.999%)쯤 되는지 식스나인(99.9999%)쯤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순도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간에 이미 일본으로부터 쪽 안정된 공급체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반도체 전용의 에칭가스를 별도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요구나 이런 것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모듈의 경우에는 모듈을 만드는 과정에서 순도가 조금 더 약한 정도의 불산이 필요했고 그것 정도는 국내산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의 무수불산 들여서 쓰는 방식이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보고요. 즉 다시 말해서 이게 순도의 문제이고 그 해당되는 순도를 어느 정도를 맞춰 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반도체 공정에서 바로 바꾸는 것, 이

런 것은 어려울 겁니다. 수출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미 기존의 공정에 맞게끔 일본에서 원자재가 그렇게 공급이 되어 왔고 그 원자재에 맞게끔 사실은 공정이 디자인되고 가동될 가능성이 큼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완전 100% 이렇게 해외에다 의존하는 방식은 아닌 게 아니라 유사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공장을 만들 때의 문제는 화관법이나 화평법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큼니다. 불산공장의 경우에도 예전에 여수항만공사에서 여수항만공사 내에 한 군데 2012년경에 불산공장을 만들려고 했다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이것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소각장, 매립장 그리고 화학물질 취급하는 곳 이 모든 것이 공적인 영역에서 필요한 부분도 지역주민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또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잘 조율돼서 진행이 될 수 있게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하는 노력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한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를 종료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추경이 정례화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으로서도 유감의 뜻을 표하고요.

오늘부터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시작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추경은 핵심적인 것은 나라경제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경제가 안 어렵다 그러면서 추경을 계속하니까 이윤배반적이 되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라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우리 위원회의 고용노동소위를 바라보는 전 국민의 시선이 대단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 위원

님들께서 지혜를 모으셔서 대한민국 경제가 회생할 수 있는 돌파구를 이번 소위에서 열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기상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강 효 상	김 동 철	김 학 용	문 진 국
송 옥 주	신 보 라	신 창 현	이 상 돈
이 용 득	이 장 우	이 정 미	임 이 자
전 현 희	한 정 애		

○청가 위원(2인)

김 태 년 설 훈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김 양 건
전 문 위 원	윤 광 식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환경부			
장 관	조 명 래		
차 관	박 천 규		
기 획 조 정 실 장	박 광 석		
자연환경정책실장	송 형 근		
생활환경정책실장	유 제 철		
물통합정책국장	김 영 훈		
물환경정책실장	황 계 영		
수자원정책국장	박 하 준		
자연보전정책관	이 호 중		
자원순환정책관	이 영 기		
환경경제정책관	김 동 구		
대기환경정책관	금 한 승		
기후변화정책관	황 석 태		
환경보건정책관	하 미 나		
정 책 기 획 관	주 대 영		
기상청			
청 장	김 중 석		
차 장	최 흥 진		
기 획 조 정 관	신 도 식		
고용노동부			
장 관	이 재 갑		
차 관	임 서 정		

노동시장정책관	김 영 중
청년고용정책관	박 종 필
근로기준정책관	김 경 선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 영 만
국제협력관	김 대 환

【보고사항】

○의안 회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019. 7. 8. 박명재·임이자·문진국·이종배·황주홍·황영철·윤영일·이종구·송언석·김광림 의원 발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019. 7. 8. 박명재·임이자·문진국·이종배·황주홍·황영철·윤영일·이종구·송언석·김광림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9. 7. 8. 최도자·정동영·주승용·이동섭·금태섭·신상진·김삼화·박선숙·이찬열·채이배 의원 발의)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019. 7. 8. 박명재·임이자·문진국·이종배·황주홍·황영철·윤영일·이종구·송언석·김광림 의원 발의)

이상 4건 7월 9일 회부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9. 7. 10. 임이자·장석춘·이명수·김기선·조훈현·김순례·김승희·윤재욱·윤종필·추경호 의원 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9. 7. 10. 임이자·정갑윤·김승희·김성원·문진국·장석춘·홍문중·김학용·정병국·원유철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11일 회부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19. 7. 11. 전재수·윤준호·박재호·최인호·이종걸·정세균·김영춘·김정호·유성엽·이수혁 의원 발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회 의원 대표발의)

(2019. 7. 11. 김종희·유성엽·정동영·정인화·장정숙·손금주·이용호·이찬열·황주홍·경대수·오영훈 의원 발의)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 발의)

(2019. 7. 11. 최인호·이상헌·이학영·전재수·정세균·박재호·윤준호·강훈식·김영춘·안호영 의원 발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 발의)

(2019. 7. 11. 최인호·이상헌·이학영·전재수·정세균·박재호·윤준호·강훈식·김영춘·안호영 의원 발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 발의)

(2019. 7. 11. 최인호·이상헌·이학영·전재수·정세균·박재호·윤준호·강훈식·김영춘·안호영 의원 발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 발의)

(2019. 7. 11. 최인호·이상헌·이학영·전재수·정세균·박재호·윤준호·강훈식·김영춘·안호영 의원 발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 발의)

(2019. 7. 11. 최인호·이상헌·이학영·전재수·정세균·박재호·윤준호·강훈식·김영춘·안호영 의원 발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 발의)

(2019. 7. 11. 최인호·이상헌·이학영·전재수·정세균·박재호·윤준호·강훈식·김영춘·안호영 의원 발의)

이상 8건 7월 12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 발의)

(2019. 7. 10. 강훈식·박홍근·안호영·민홍철·송옥주·이규희·김영진·최인호·조응천·신창현·고용진·신동근 의원 발의)

7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